

건설공사 간접비 제도개선 방안 - 하도급공사를 중심으로 -



이보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bora@ricon.re.kr

1. 서론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는 적절한 공사비를 적절한 시기에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기관은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의 다각적인 수고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12월에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처럼 건설공사의 주체인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간의 주된 분쟁의 쟁점은 공사대금이다.

최근 장기계속공사의 추가 간접비 미지급의 대법원 판결 이슈 등 건설업체의 간접비 지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전문 건설업체의 간접비 지급 상황은 직접비 지급에 비해 더욱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주기관과 수급인간의 간접비 지급 분쟁은 건설구조의 하부단계인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대여업자의 체불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건설사들의 하도급간접공사비 지급실태를 분석 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2. 하도급 간접공사비 지급 실태

하도급 계약시 빈번하게 나타나는 불공정 특약에 대한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불공정 특약은 공사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간접비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9.1%를 차지하고 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금액이며, 간접비의 경우 그 내역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표 1. 하도급계약시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약조항의 내용

(단위 : 업체수, %)

구 분	업체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전가	68 (15.5)
서면(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고 발생된 비용 전가	65 (14.8)
입찰내역(산출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발생된 비용 전가	60 (13.7)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전가	58 (13.2)
간접비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	40 (9.1)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 전가	39 (8.9)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불인정	39 (8.9)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책임 전가	27 (6.2)
원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인허가, 환경 또는 품질관리 등의 비용 전가	22 (5.0)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 배상책임 전가	21 (4.8)
합 계	439 (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분석보고서

표 2. 건설하도급분쟁조정 현황

구 분	해당 건수		해당금액(백만원)	
	건	구성비	금액	구성비
공사대금 미지급	173	45%	55,853	35%
추가공사 대금	115	30%	72,385	45%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5	1%	31,954	20%
물가연동 미적용	2	1%	31,954	20%
기타	87	23%	31,954	20%
계	382	100%	160,192	100%

출처: 건설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내부 자료 재작성(2018년 데이터 기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건수중(2018년간 총 382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함, 중복 응답포함), 그 중 추가공사 대금이 분쟁구성 건수 30%, 금액대비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1 하도급 간접공사비 미계상 실태

하수급인은 하도급 입찰시 수급인이 작성 및 배부한 물량내역서를 토대로 단가를 산출하여 하도급금액을 확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일부는 수급인이 하도급내역서를 작성하여 현장 설명시 배포하는 방식으로 수급인이 배부한 물량내역서 비목 등을 하도급자가 추가·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수급인은 추후 공사발주 등을 고려하여 수급인에게 간접비 항목의 확보 및 지급 요청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법적 이외의 간접비 항목을 제대로 보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공통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간접비 미계상 원인

구 분	해당 비율(%)
수급인이 제시한 간접비 항목이 삭제된 설계내역서대로 하수급인이 작성함	65
하수급인이 간접공사비 정산의 불편함으로 인해 해당 항목 간소화	14
내역서에 기재하였으나, 수급인에 의해 거절	5
간접비 항목 지급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음	4
기타	12
합계	100

출처: 하도급 간접공사비 계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자료 재작성

건설공사 성격에 따라 항목구성이 달라지는 것을 감안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한 결과, 전문건설업체별 하도급계약을 살펴보면 법적 의무 간접비 이외 항목을 제외하고는 각각 다르게 구성되었다. 즉 업체별 계약 내역서의 간접공사비 항목의 구성이 상이했으며, 설계 내역서에 간접비 항목이 구성되었더라도 제대로 계상된 항목이 아니라 비용의 일부 및 전체 누락되어 있었다.

2.2 공기업에 따른 간접공사비 미지급 실태

수급인의 간접비 미지급은 주로 발주자에 의한 추가공사비 혹은 간접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하수급인에게 간접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계별 도급방식인 건설공사의 특성상 각 도급단계마다의 추가공사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도급단계의 맨 마지막인 하도급업체에게까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될 수밖에 없다.

공기업에 따른 간접비의 경우 수급인은 거래상대방인 하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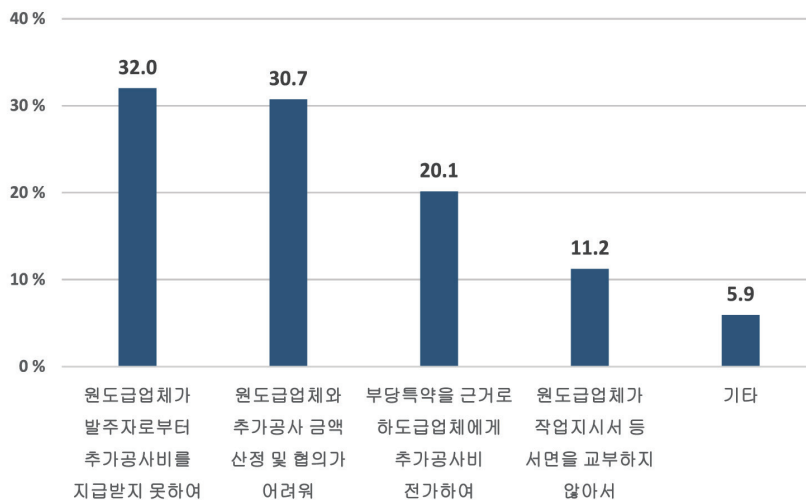


그림 1. 원도급업체가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

출처: 이보라, 박승국,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미지급실태 및 개선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7.

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자의 공사계획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대한 간접비용을 반영함에 있어 간접비 일부만을 인정하거나 간접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3. 간접비 지급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간접비 미계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항목에 원사업자가 도급내역서상 비목(직접 공사비 및 간접공사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통합하거나 물량 등을 축소한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원천적으로 간접비 미계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하도급설계내역서에 간접비 항목 및 반영 비율을 정확하게 작성할 것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간접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항목을 명시하는 방안이다. 즉, 현행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내역서 부분을 별도로 첨부하는 것으로 공사 특성에 따라 불필요한 간접비항목이 있을 경우 내역서 상에 해당 간접비의 불필요한 사유와 문구를 간략히 작성하도록 하고,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비 항목은 내역서 상에 명시하되, 원도급사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작성하도록 한다.

다음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미지급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건설법 시행령 제34조의 8 부당특약 유형에 수급인의 간접비 전가를 추가하여 간접비 청구권 포기 합의가 하도급법시행령 이외

건설산업기본법상 부당특약에 포함시켜 관련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하도급법 제16조의 2를 개정하여 수급인의 간접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하수급인의 간접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간접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을지라도 하수급인의 간접비 지급을 확보할 수 있어 최근 대법원판례에 따른 하수급인의 간접비 미확보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도급법 제16조를 개정하여 공기 연장시 발생하는 추가공사비 즉 간접비 부분에 대한 하도급 금액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4. 결론

하도급거래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이 수급인과의 거래관계에서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문건설업체의 간접비 미지급은 근본적으로 원·하도급의 불공정한 거래구조로 인한 것으로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가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간접비를 스스로 확보하기에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간접비용이 적절하게 지급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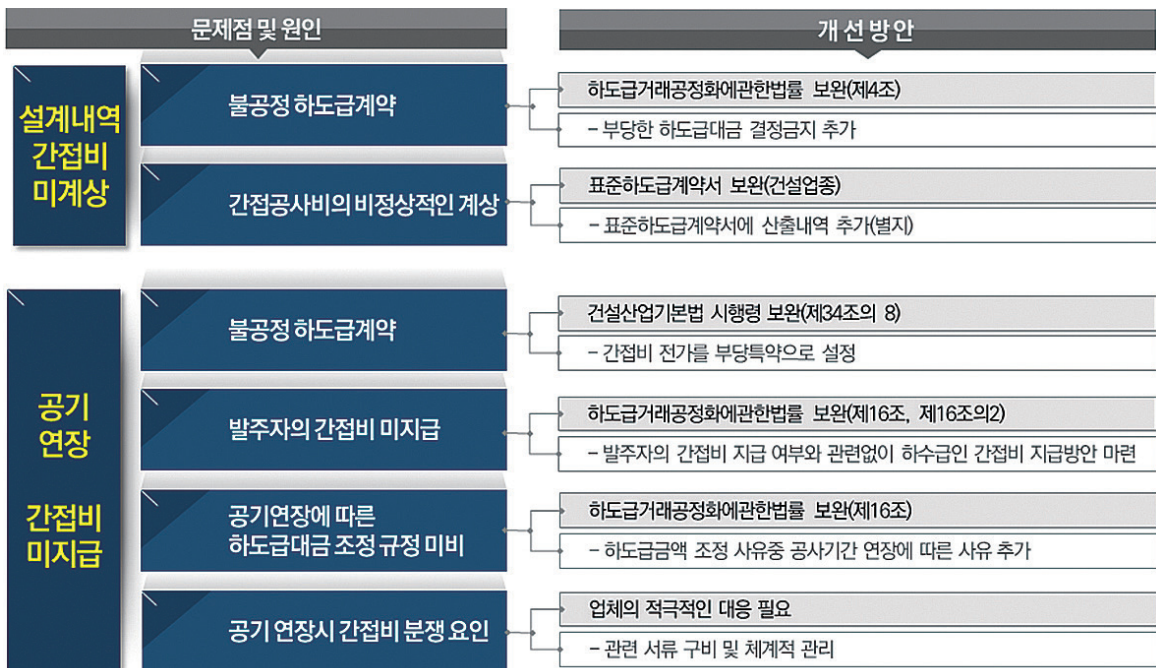


그림 2. 문제점 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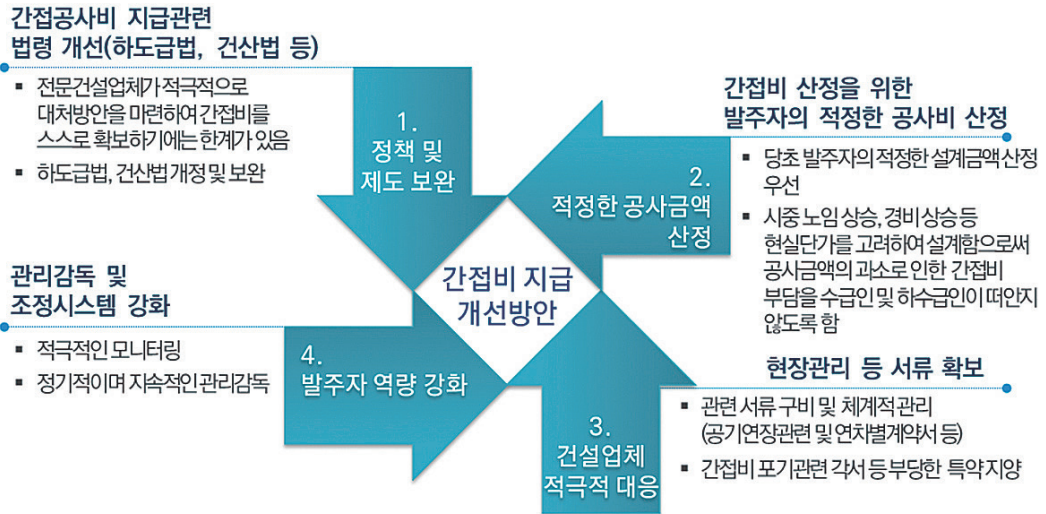


그림 3. 하도급 간접공사비 개선방안 종합

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 문제 해결,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합리적인 간접비 산정과 지급 등 건설업체의 현장관리를 위한 서류 확보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하도급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18.
2. 이보라, 박승국,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미지급실태 및 개선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7.
3. 이종광, 박승국,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7.
4. 정기창,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예측을 위한 산정모델, 동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5. 조동희, 공공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문제의 제도적 개선 방안,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6. 조성환, 건축공사 원가계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국가 계약관련법령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7. 조현정, 하도급 간접공사비 계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8.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2017.